

한동훈·원희룡 불 붙는 자객공천설

與 “내년 총선 수도권 필승위해 총력전” 목소리 커져 안철수·이준석 까지 거론... 장제원·권성동은 용퇴론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권영세 의원 이 현역 국무위원 중 개각을 통해 유일하게 국회로 돌아오면서 윤석열정부 장관들의 여의도 귀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또한 총선 인선 물망에서 비윤계를 비롯해 재야의 스타급 거물까지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국무위원 중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올해 초부터 한 장관에게 서울지역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역구 출마설이 거론됐다. 한 장관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건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로 주목 받고 있는 수도권 선거 때문이다.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기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몸값을 높이며 사실상 윤 정부에서 몸값과 이름값이 가장 높은

계 한 장관”이라며 “지난해 국감 및 올해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을 대상으로 한 ‘돌직구 발언’으로 스타덤에 화력을 돋우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활용하면 협지인 수도권에서도 중도층의 관심을 끌면서 여론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한 장관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략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 관련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사고 당협 공모 결과 ‘협지’에서는 현역 비례대표조차 나서길 주저할 정도로 ‘뺨발’과의 양극화가 극심한 모습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윤 정부 ‘간판 인사’들이 수도권 선거 분위기를 띄워 줘야 한다는 기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후문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 공개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는 상황으로 일각에

서는 그의 법무부 장관 연임 후에 총선 후 재보궐 선거 등을 통한 원내진입 루트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목 받는 현역인사다. 그는 과거 서울 양천 갑에서 3선을 지냈으며 현재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맞서 원 장관이 경기 고양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수장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를 푼 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이 출마 적격 지역으로 좁혀왔다. 고양 갑 현역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원 장관이 최근 ‘대곡-소사선 통동식 배제’ 문제로 최근 설전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각에서는 비윤계 인사들 포용론도 올라왔다. 대표적 거물급 인사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안철수 의원 등의 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성남갑의 안 의원은 일찌감치 해당 지역구 출신이 자동지 쟁거기에 나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교통정리가 필요할 상황이다.

이 전 대표와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 전 의

원의 경우 서울 노원병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비윤계 포용론을 주장한 한 정치권 인사는 본지에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 같은 경우는 비윤계라 하더라도 이번 대선 승리에 공이 있는 만큼 반드시 포용해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의 인사 기조인 ‘탕평 인사’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두 사람은 안고 가는 게 지지기반을 다지면 수도 총선 캐스팅 보더로 좁히는 중도층의 마음을 달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권 장관을 제외하고 이번 개각에서 남은 현역 국회의원은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서울 강남을) 외교부 장관으로 이들은 지역구 사수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선거일 90일 전)을 고려해 올 연말쯤 복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 조 윤해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권성동 의원의 경우 총선 출마 의지와 상관 없이 대의적 명분을 위해 ‘용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다.

장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김남희(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혁신위 2호 쇠신안은 ‘꼬리자르기 탈당’ 방지책 마련

‘거액 코인’ 김남국 비판에 복당 벌칙 대폭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호 쇠신안으로 면피성 ‘폼수 탈당 방지’ 방안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혁신위는 단순한 복당 벌칙 규정의 강화가 아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남국의 혁신위 대변인은 2일 통화에서 “최근에 당내에서 비위 논란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탈당을 했다. 이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혁신위 내 고민이 있어 대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벌칙 규정을 엄격하게 한다고 꼭 그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휘말려 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5월14일 탈당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SNS에 “오늘 사랑 받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는 등 ‘잠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복당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의 태도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면피성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

다. 실제로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쇠신 의총이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김 의원의 탈당 이후에도 조사와 징계를 약속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일각에서는 탈당한 김 의원이 민주당의 추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내다 보는 동시에 추가 조사 방침은 당장 쏟아지는 면피성 자진 탈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尹대통령, 신임장·차관급 13명에 임명장

각 부처 고위공무원 대규모 인사 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들은 김완선 기획재정부 2차관·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임성준 환경부 차관·이성

희 고용노동부 차관·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재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배석한 참모진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영록 기자 kyw@skyedaily.com

산재보상 올라잇!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령급여지급

빠른 쾌유를 돕는!

02

요양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